제206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일본군의 패인. 실패한 군대의 조직론 - 미성숙한 국가와 군대의 비극

강사 : 최종호(崔鍾浩 : 변호사)

시간 : 2017. 04. 04. 화. 12:00 - 14:00

2017년 4월 4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06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군의 패인. 실패한 군대의 조직론 – 미성숙한 국가와 군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최종호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최종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제44기) 수료 후, 국회 사무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논형, 2015), 「일본군의 패인」(논형, 2016) 등이 있다.

최종호 변호사는 본 강연에서 1945년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그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5년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5년 전쟁'은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1945년 9월 2일까지 만으로는 14년을 가리킨다. 최종호 변호사는 '15년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연쇄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1945년 종전까지이어졌다는 것으로 일본의 주류적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본인의 추측으로 일본의 군부・정계의 지도자들의 거대한 마스터플랜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전쟁이다. 두 번째 견해에 입각해서 보면,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즉, 도쿄재판에서는 범죄를 a급과 b급으로 나누는데 a급은 전쟁 수행과정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한 전범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테마는 '공동모의'라는 법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반드시 전쟁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계획을 짠사람들도 거대한 침략 전범, 공동 전범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최종호 변호사는 태평양 전쟁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당시 일본군이라는 것은 사츠마(薩摩)·쵸슈(長州)의 군을 일부 끌어들여 만든 것이었다. 1800년대 후기까지 일본군은 내부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78년 세이난 전쟁(西南戰爭)이 끝난 이후, 일본 육군·해군은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 16년 정도 만에 청나라는 격파할 수 있는 대군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10년, 20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만주사변은 1931년 6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중국군을 공격하여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일본인들이 만만의 준비를 한 지극히 계획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책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하극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다나카 유키치 (田中隆吉: 1893~1972) 라는 사람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

이후 1937년에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 7월 7일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 불리는 로구교(蘆溝橋)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8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본은 1941년 12월 8일에 진주만 공격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무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철이 필요했다. 당시 철강 생산량은 미국이 7천만톤, 일본은 7백만톤이었다. 미국의 10분의 1이었는데, 그것도 스크랩을 미국에서 78%를 들여와서 만든 것이었다. 결국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하면 일본은 못 만드는 실정이었다. 1941년 당시 일본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종호 변호사는 일본의 전쟁에서 세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통수권의 독립이다. 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정과 군령 두 가지 틀로 나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결합해서 가야 한다. 일본은 내각에 육군정과 해군정이 있는데 이들은 군정을 담당 한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군정과 군령이 하나로 같이 가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참모군부하 고 군령부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었다. 육군하고 해군의 군 조직은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은 헌법적 결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 운영상으로는 천황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총리가 다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지휘권은 총리대신에게 없었다. 앞서 설명했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은 정부가 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육해군의 대립이다. 일본 육군은 1941년까지 미군을 상 대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 육군은 기본적으로 소련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육군과 해군이 결국은 협동작전을 했었어야 했다. 그 러나 한 명의 지휘관이 육군과 해군을 같이 통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육군에서 계속 거부했다. 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사회가 가지는 분파주의의 반영이었다. 최종호 변호사는 이 러한 분파성은 에도 막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육군 내부의 통제가 부적절 했다. 지속적으로 군 내부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 하극상의 함정은 연쇄구조로 똑 같은 형상의 가해가 계속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헌법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일본의 천황은 입헌군주제적 천황이었다. 실질 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밑에서 완성된 안을 올리면 일본의 천황은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만 한 것이었다. 천황이라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대라도 군인한테 모든 결정권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군인은 넓은 시야로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지만 거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 의 핵심에 있었다. 세 번째는 권력집중의 결여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비상시에는 권력이 집중한 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내각 총리대신의 권한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최종호 변 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상의 결함에 의한 권력의 분립을 야기,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권력 집중 의 결여로 인해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정리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 었다.

<질의 응답>

질문: 중일전쟁, 2.26사건 이후 일본은 군부 파시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부 파시즘에 대한 이미지는 군부가 권력을 통제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군이 전쟁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이미지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군부 파시즘은 너무 거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통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관예우가 있지만 일본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것은 군인들을 통제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육군이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완성된 기계처럼 되어있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고 내부의 알력은 있었습니다. 군부 파시즘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들은 될수 있지만 내부적에서 과연 알파이자 오메가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셨듯이 군인들이 시야가 좁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 논지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시야가 좁을 수 밖에 없는 특히나 작전계통의 군사들한테 그런 작전의 시나리오를 다 맡겨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또 다른 패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합동 관련해서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지만이렇게 하면 비역사적일 수도 있지만 인물 문제에 귀속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정치하고 군정관계에서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구조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답 : 이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질문 :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책적 군략적인 부분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 말씀하신 취지는 누군가가 최종적 결정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각 총리대신조차도 해군의 눈치를 봤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수부 자체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